

제2차 북핵실험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

전 성 훈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문제의 현황과 배경

북한이 5월 25일 오전에 함경북도 길주군 평계리에서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6년 10월 9일 1차 실험을 한 후 2년 7개월 만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4.7, 우리나라 기상청은 규모 4.5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인공지진이란 자연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지진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지진 규모의 폭발을 야기한 상태라는 의미인데, 핵실험 이외에 지진에 버금가는 파괴력 있는 인공지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이번 실험이 폭발력과 조종기술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된 성공적인 실험이었으며 앞으로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핵실험 성공으로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한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어 왔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매체를 동원해서 남한의 대북정책과 한·미 동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올 초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도 남한과 동북아 주둔 미군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핵을 폐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지난 달 5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를 복원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이후 더욱 격화되었다. 4월 14일 북한 외무성은 의장성명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6자회담을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불능화되었던 핵시설을 원상 복구함과 아울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월 29일 외무성대변인 성명도 유엔의 제재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위적 조치의 일환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5월 8일 외무성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부시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실망을 표시하면서 “이미 밝힌 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브루킹스연구소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북한의 의도

북한의 2차 핵실험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시점의 문제였을 뿐이다. 당초 TNT 4KT의 파괴력을 목표로 했던 1차 핵실험은 1KT의 폭발에 그침으로써 부분성공에 그친 미완의 핵실험이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기를 만들어야만 미국을 상대로 한 억제력과 협상력이 동시에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2차, 3차 핵실험은 과학기술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무기체계의 개발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돈만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개발을 시작하면 자체의 모멘텀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다.

문제는 왜 5월 25일이라는 시점을 선택했는가 하는 점이다. 2차 핵실험의 정치·외교적인 배경은 4월 5일 실시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부단속용이다.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2012년을 겨냥해서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후계 구도의 정착과정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내용 카드이다. 4월 9일 출범한 김정일 3기 체제와 후계구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업적이 필요한데,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함께 핵실험은 이런 목적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업적이 될 수 있다. 핵실험의 성공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번 핵실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새로운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인민과 군대를 크게 고무시켰다고 평가했다.

둘째, 대미협상용이다. 북한 당국은 당초 기대와 달리 북·미 대화에 선뜻 나서지 않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결국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워싱턴의 신경을 세계 건드려야만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북·미 직접대화의 기선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셋째, 대남압박용이다. 2차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대남전략의 일환이다.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한다는 각오 하에 각종 긴장고조 행동을 감행함으로써 남한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남한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남한 정부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하도록 만들기 위한 압박카드인 셈이다.

우리의 대응

동양의 미덕과 전통을 따지지 않더라도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북한 정권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도 모르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서거로 온 나라가 비통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편으론 애도의 조전을 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핵실험과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북한 지도부는 인륜을 저버린 집단이다. 더욱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고 국내의 비판을 무릅쓰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대북정책을 펼친 당사자이기에 2차 핵실험은 실험 자체보다 그 시점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크다. 노무현 정부 내내 북한이 그토록 외쳐왔던 ‘우리민족끼리’의 허상이 무너져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대응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북한과 1991년 12월 31일 체결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화 공동선언)이 당사자인 북한의 집요한 위반으로 완전히 폐



기되었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기 이전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했다. 서명 당시에 북한은 10-14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2004년도 국방백서는 밝히고 있다. 결국 비핵화 공동선언은 체결 당시에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생아와 같은 불행한 문건이다.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추진, NPT 탈퇴, 핵보유 선언 및 핵실험 등을 진행하면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해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합의 당사자가 고의로 합의를 파기하면 그 선언은 원천 무효가 된다. 서명시점부터 상대방이 집요하게 위반한 문건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둘째,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남북 협상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의 정책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6자회담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이 해법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북한이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사실상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제는 6자회담에만 몰입하는 단선적인 북핵해법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가능성과 여러 가지 수단을 모두 고려하는 범정부 차원의 복합적인 해법을 구상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할 경우 핵보유국 북한을 관리하면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새로운 남북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위협하거나 핵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한 군사적 차원의 대비책도 갖춰 나가야 한다. 물론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노태우 정부 이후 정착된 비핵정책, 즉 ‘핵무기 보유 포기 정책’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국익과 합치된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정치·군사적 무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탄탄한 군사적 방어태세를 갖추고 한·미 동맹도 굳건하게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전환은 그 원칙은 유지하되 운용의 모를 살려서 북핵에 대비한 한국의 방어태세가 갖춰질 때까지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